

역대 한국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응답: 전쟁과 평화 전통을 중심으로

이창호 (장로회신학대학교 강사)

I. 서론

II.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의 관점에서 통일 정책 분석하기

1. 이승만 정부(제1공화국, 1948-1960)
2. 박정희 정부(제3,4공화국, 1962-1979)
3. 전두환 정부(제5공화국, 1980-1987)
4. 노태우 정부(제6공화국, 1988-1993)
5. 김영삼 정부(문민정부, 1993-1998)
6. 김대중 정부(국민의 정부, 1998-2003)

III. 거룩한 전쟁, 정당전쟁 그리고 평화주의

1. 십자군에 나타난 거룩한 전쟁
2. 루터와 칼빈의 정당전쟁론
3. 에라스무스의 평화주의
4. 세 가지 유형들

IV. 세 가지 유형의 관점에서 역대 정부의 통일 정책 평가하기

1. 이승만 정부(제1공화국, 1948-1960)
2. 박정희 정부(제3,4공화국, 1962-1979)
3. 전두환 정부(제5공화국, 1980-1987)
4. 노태우 정부(제6공화국, 1987-1992)
5. 김영삼 정부(문민정부, 1992-1997)
6. 김대중 정부(국민의 정부, 1997-2002)

V. 결론

• **ABSTRACT** •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nalyze South Korea's unification policies and make ethical suggestions in light of Christian theological teachings on war-peace tenets. I will, first of all, analyze South Korea's unification policies, particularly in terms of tension reduction and peaceful coexistence, which are the most significant and urgent goals for unifying two Koreas. This analysis covers major unification policies made by the republics after the division, namely from the Rhee government (1948-1960) to the Kim government (1998-2003). Second, I describe holy war (the Crusade), just war (Luther and Calvin) and pacifism (Erasmus) and examine their political and ethical implications. Third, I define "holy war type," "just war type" and "pacifist type" and evaluate each policy in terms of these three types. Lastly, I conclude with some ethical suggestions from the Christian traditions on war-peace tenets, so that they can reduce tension reduction and foster peaceful coexistence between the two Koreas.

Key words : Unification policy, holy war, just war, pacifism, Christian social ethics

I. 서론

한반도에서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상존한다. 그야말로 휴전 상태일 따름이다. 북핵 문제는 진행형이고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늘 경계해야 하는 상황이다. 논란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천안함 사건’은 이러한 상황의 구체적인 보기라 할 것이다. 서로에 대한 불신과 체제에 대한 부정 등이 둘 사이를 규정하는 기본적인 표현들을 부정할 수 없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김대중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전향적 통일 정책을 수립, 집행하였다. 햇볕 정책을 내걸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한이 군사적으로 도발하지 않는 한, 흡수 통일을 시도하지 않겠다고 천명하였다. 이 정책의 기본 뼈대는 긴장완화와 상호인정을 기반으로 평화롭게 공존하는 남과 북의 미래를 추구하는 것이다.¹⁾ 요컨대 긴장완화와 평화공존, 이 두 가지는 통일을 향해 가는 길에 이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책적 목표라 하겠다. 햇볕 정책 이전의 통일 정책들이 정부 주도적이었다고 한다면, 김대중 정부의 통일 정책의 특징은 정부와 국민이 함께 하는, 다시 말해 정부와 국민이 합의하고 힘을 모아 실천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김대중 정부의 이런 정책적 특징을 감안하더라도, 정부의 정책을 주의 깊게 분석하고 성찰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통일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의 주도권은 여전히 정부에 있기 때문이다.²⁾

실로, 한반도는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 이런 현실에서 교회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분단의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심고 평화로운

1) Chung-In Moon and David I. Steinberg, eds., *Kim Dae-jung Government and Sunshine Policy: Promises and Challenges*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1999), 11-12.

2) Jinwook Choi and Sun-Song Park, *The Making of a Unified Korea: Policies, Positions and Proposals* (Seoul: The Korean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1997), 1.

통일을 이루기 위해 교회가 이바지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는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통일을 위한 노력들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어거스틴, 아퀴나스, 루터, 칼빈 등이 대변하는 기독교의 전통적인 사회윤리에 따르면, 세속 정부는 공적 평화를 유지하고 범죄와 악행을 제어하며 또 죄와 악의 결과를 치유하기 위해 존재한다. 세속 정부가 인간의 개인적, 공동체적 실존을 지탱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 기독교인들은 세속 정부의 존재와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기독교인들은 인간 실존의 외적 혹은 공적 요소들을 지탱하고 또 증진하는 정부의 노력을 격려하거나 또는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다. 한국 상황에서 인간의 개인적, 공동체적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외적 혹은 공적 요소 한 가지를 꼽으라면, 그것은 분단과 갈등의 현상인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일 것이다. 교회는 남북의 평화로운 공존과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이루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격려하고 비판적으로 성찰함으로써 통일에 이바지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통일을 위한 정책 수립과 그 집행 과정을 기독교 가치와 전통의 입장에서 평가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전쟁과 평화에 관한 기독교의 신학적, 윤리적 가르침의 빛에서 한국의 통일 정책을 분석하고 기독교 사회윤리적 제안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가장 중요한 정책적 목표인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의 관점에서 남한 정부의 통일 정책을 분석할 것이다. 분단 이후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대중 정부의 통일 정책이 그 분석의 대상이 될 것이다.

둘째, 십자군 전쟁에 나타난 거룩한 전쟁(holy war), 루터와 칼빈의 정당전쟁론(just war) 그리고 에라스무스의 평화주의(pacifism)를 다룰 것인

데, 특히 이들 속에 담긴 정치적, 윤리적 함의를 검토할 것이다. 베인톤(Roland H. Bainton)에 따르면, 기독교 윤리의 역사에서 전쟁과 평화에 관한 대표적인 세 가지 입장은 평화주의, 정당전쟁 그리고 십자군 전쟁이다. 베인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연대기적으로 보면 차례 대로다. 초대 교회는 콘스탄틴 황제 이전까지 평화주의를 지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황제 때에 이르러서, 부분적으로는 교회와 국가가 밀착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또 부분적으로는 야만족의 침입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4세기와 5세기에 고전 세계로부터 정당전쟁 교리를 들여오게 된다. 정당전쟁의 목적은 정의와 평화를 되찾는 것이다. 정당전쟁은 국가의 권위 아래서 치러져야 했고 또 선한 믿음과 인간애(humanity)의 규범을 지켜야만 했다. 어거스틴이 덧붙인 요소는 그 동기가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과 수도승과 사제들이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십자군은 중세에 일어났는데, 이는 일종의 거룩한 전쟁으로 교회나 영감을 받은 종교 지도자의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생명과 재산의 관점에서 정의를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이상 곧 기독교 신앙을 위해서 싸웠다.³⁾

앞에서 말한 대로, 한반도는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 서있다. 통일은 군사적 충돌을 억제하고 남과 북 사이에 평화를 증진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의 산물일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 정책 수립은 필연적으로 정치적 폭력(군사력) 사용의 금지 혹은 정당화의 문제, 평화 증진의 과정이나 방법에 관련된 문제 등에 대한 토론과 의견 개진을 동반하게 된다. 기독교 신학의 전통에서 남한의 통일 정책을 분석하려 할 때, 평화주의, 정당전쟁, 거룩한 전쟁과 같은 전쟁과 평화 이론들은 유용한데, 이들의 주된 관심이 평화의 유지와 회복, 평화를 위해 사용한 폭력(혹은 강제력)의 금지

3) Roland H. Bainton, *Christian Attitudes Toward War and Peace: A Historical Survey and Critical Re-evaluation* (New York/ Nashville: Abingdon, 1960), 14.

또는 정당화에 있기 때문이다. 정당전쟁을 다룰 때 필자는 루터와 칼빈을 선택할 것인데, 이들은 “도덕적으로 변호할 수 있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된 폭력에 대한 주류 기독교의 반응으로서 정당전쟁론이 갖는 주도적 입지”를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⁴⁾ 즉 루터와 칼빈의 정당전쟁론은 정당전쟁 전통의 전형적인 형태이기에 이 두 사람을 선택했다는 말이다. 에라스무스의 평화주의 역시 적합한데, 그의 전쟁과 평화 이론이 성경과 교부들의 가르침에 근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성과 인간 본성에도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야수도 같은 종족끼리는 싸우지 않는데, 인간이라면 더욱더 동료 인간을 존중하는 것이 당연하고, 인류는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면서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에라스무스의 이러한 보편적 접근은, 통일의 추구가 본능적으로 부여된 민족적 유대의 회복에 대한 강한 열정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통일문제를 논의하는데 적절하다 하겠다. 뿐만 아니라 이성과 자연법에 그 방법론적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은 세속 정치 체제의 정체성과 기능을 이해하는데 적합하다고 본다.

셋째, 앞에서 살핀 바를 근거로 기독교 전쟁과 평화 전통의 세 가지 유형인 “거룩한 전쟁 유형,” “정당전쟁 유형” 그리고 “평화주의 유형”을 기술할 것이다. 이 유형들은 사회윤리적 규범을 함축하고 있어서 통일 정책에 내재하는 규범적 지향 혹은 특성을 분석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예를 들어, 이승만 정부의 통일 정책은 기본적으로 “거룩한 전쟁 유형”의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여기에서 북한과 평화로운 관계 형성의 가능성은 거의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념적인 측면에 비중을 많이 두어 통일을 위해 전쟁도 불사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견지한다. 이에 비하여 김대중 정

4) Lisa Sowle Cahill, *Love Your Enemies: Discipleship, Pacifism, and Just War Theory* (Minneapolis: Fortress, 1994), 118.

부의 정책은 “평화주의 유형”에 가깝다. 북한의 폭력에 대응해서는 폭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정하며 철저하게 준비한다는 측면에서는 “정당전쟁 유형”의 여지가 전혀 없지 않다는 것을 밝혀 둔다. 마지막으로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몇 가지 윤리적 제안을 할 것이다.

II.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의 관점에서 통일 정책 분석하기

1. 이승만 정부(제1공화국, 1948-1960)

이승만 정부의 통일정책은 북진 정책으로 요약된다. 공산주의자들을 멸절하기 위해서라면 전쟁도 불사한다는 강경책이다. 심지어 휴전 협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⁵⁾ 1954년 4월 27일 제네바에서 남한 정부는 통일을 위한 하나의 제안으로서 북한에서 총선거를 치르자고 하였다. 총선거는 남한의 헌법적 과정에 기초해야 하며 유엔(UN)의 감독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 제안의 내용이었다.⁶⁾

북진정책이나 총선거 제안 등과 같은 대북 정책 혹은 통일 정책의 함의는 남한 정부가 북한 정권의 합법성 혹은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승만 정부는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는 남한이라는 신념을 굳게 지켰던 것이다.

2. 박정희 정부(제3, 4공화국, 1962-1979)

북한과의 협상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지만, 박정희 정부는 기본적으로

5) 양영식, 『통일정책론』 (서울: 박영사, 1997), 11-15.

6) 위의 책, 15-20.

로 북한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한반도가 하나 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승공(勝共)이라 생각하였다. 승공 통일 정책은 ‘선(先)건설 후(後)통일’로 그 방향성이 구체화되었다. 남한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 분야에서 북한을 능가할 때, 비로소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1960년대 후반에 발생했던 북한 무장 게릴라의 남침과 같은 폭력적 사건들은 반공을 기치로 내건 안보 정책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⁷⁾

1970년에 들어서면서 박정희 정부의 통일 정책은 급격한 변화를 맞게 된다. 미국과 소련이 화해의 길로 들어서면서, 그러한 화해 분위기가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1970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남과 북 사이에 ‘발전과 건설 그리고 창조의 경쟁이 있어야 할 것임을 천명한다.’⁸⁾ 이것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한이 북한과 평화롭게 공존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어서 그 중요성이 자못 크다고 할 수 있다.⁹⁾ 앞에서 본 대로 남한 정부가 북한을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평화공존을 향한 남한 정부의 변화는 특기할 만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근본적인 이유로 남한이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하여 북한 체제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들 수 있겠다.¹⁰⁾

나라 안과 밖에서 생긴 호의적인 변화는 역사적인 ‘7.4 남북 공동성명’의 중요한 배경이 된다. 1971년 말에 있었던 남북적십자회담에 이어 가졌던 여러 차례의 비공식적인 접촉은 공동성명을 내기에 이른다. 이 성명에

7) Jinwook Choi and Sun-Song Park, 앞의 책, 49.

8) *A White Paper on South-North Dialogue in Korea* (Seoul: National Unification Board, 1982), 315-320.

9) Hakjoon Kim, *Unification Policies of South and North Korea*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1978), 299-300.

10) 양영식, 앞의 책, 160.

서 남과 북은 ‘자주, 평화 그리고 민족대단결’이라는 원칙 아래 통일을 위해 함께 힘쓰기로 합의한다. 성명과 더불어, 통일에 관한 여러 문제를 논의할 남북협력위원회를 발족시킨다. 이는 남북 관계를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게 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한다.¹¹⁾

그러나 불행하게도, 미국과 소련 사이의 우호적 관계는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동서 냉전이 다시 강화되고, 그러한 국제 정세의 변화는 한반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무엇보다도 7.4 공동성명의 해석을 두고 남북한은 갈등하기 시작한다.¹²⁾ 북한 정권은, 자주 원칙은 미군 철수를 통해, 평화의 원칙은 남한 군대 현대화의 중단으로, 마지막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은 남한 모든 인민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실현될 것이라고 주장한다.¹³⁾ 이러한 해석은 근본적으로 남한 체제의 전복을 목표로 하는 김일성의 ‘3대 혁명강화계획’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 이에 반하여 남한 정부는 공동성명의 3대 원칙을 이와는 사뭇 다르게 해석한다. 첫째 자주 원칙은 남과 북 사이의 직접 교류를 의미하고, 미군의 주둔은 짐이 아니라 평화를 유지하는 도구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둘째, 평화의 원칙은 상호 불가침 조약을 통한 평화공존을 의미한다. 셋째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따르면, 통일은 이념과 체제를 초월하여 남과 북이 한민족이라는 공감대 아래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¹⁴⁾

또한 1970년 중반 남과 북 사이에 존재했던 경제적, 군사적 경쟁은 남북 관계에 더 큰 긴장을 가져다주는 주된 원인이 되었다. 북한은 남한 체제 전복 혹은 남한 내부에서의 혁명의 완성이라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고, 베트남 전쟁의 결과는 북한을 더욱 자극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한 정

11) Hakjoon Kim, 앞의 책, 304-311.

12) Jinwook Choi and Sun-Song Park, 앞의 책, 63-65.

13) 위의 책, 65-66.

14) 같은 책.

부는 북한의 위협에 대하여 안보 태세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다. 안보 강화를 이루기 위해, 남한 정부는 무엇보다도 미국과의 군사적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된다. 팀스피리트(Team Spirit) 합동 군사 훈련이나 율곡 사업 등이 그 구체적인 보기들이다.¹⁵⁾

3. 전두환 정부(제5공화국, 1980-1987)

전두환 대통령은 이전 통치자들과는 달리, 명시적으로 ‘북진통일’과 같은 공격적 통일 정책을 천명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능가해서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승공적 정책을 고수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념적으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내포하는 남한 체제로 북한을 압도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통일을 바라보았던 것이다.¹⁶⁾

전두환 정부의 통일 정책을 면밀히 살펴보면,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이라는 목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음이 발견된다. 남한 정부는 남북한 지도자의 상호 방문(1981)을 제안하고 나서, 곧 이어서 남북정상 회담을 제안하였다. 만약 이 제안이 성사되었다면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전두환 정부의 이와 같은 제안은 비정치적 교류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요소가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의 증진에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접근은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1982)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 방안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민족통일협의회를 구성하여, 남북 국민들의 염원을 담은 통일 헌법 초안을 작성하는 것이다. 헌법안은 남과 북의 국민투표에 붙이고, 최종적으로는 통일 헌법에 근거해 통일 의회와 통일 정부를 수립하는 것

15) 위의 책, 67-68.

16) B. C. Koh, "South Korea's Unification Policy," in Jay Speakman and Chae-Jin Lee, eds., *The Prospects for Korean Unification* (Claremont, Calif.: The Keck Center for International and Strategic Studies, 1993), 78.

까지 포함한다.¹⁷⁾ 둘째, 남북 관계에 관한 잠정합의서는 구체적인 통일 방안들을 제시한다. 상호평등에 근거한 우호적 관계 유지, 모든 분쟁의 평화적 해결, 국내 문제에 불간섭, 휴전 체제의 유지와 군사비 증액 중단, 남과 북이 서명한 모든 국제 조약 존중, 이러한 문제들을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한 연락 사무소 개소 등이 그것이다.¹⁸⁾

정책 수립 차원에서의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 007편 피폭 사건과 랑군(Rangoon) 폭파 사건 등 1983년에 일어난 비극적 사건들은 남북 관계를 급속히 악화시킨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1984년 1월에 남한과 북한과 미국간의 3자 회담을 제안한다. 그러나 이 회담은 실제로는 별개의 두 회담을 포함하는데, 하나는 미군 철수를 의제로 한 미국과의 회담이고, 다른 하나는 불가침 조약 수립을 위한 남한과의 회담이다. 남한과 미국은 이 제안을 거부하고 남북 직접 대화를 제안하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한다.¹⁹⁾

남북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을 때, 엄청난 홍수 피해로 고통하던 북한이 남한에게 구호의 손길을 요청하는 일이 발생한다. 남한 정부는 북한의 요청을 수용하였고, 이 일이 남북 관계 개선의 계기로 작용하게 된다. 1984년 9월과 10월에 구호물자가 북한으로 운반되면서 이는 다양한 남북 교류로 이어진다. 1973년 이후로 중단되었던 적십자회담이 재개되고, 남북한 의회의 만남을 논의하기 위한 회담이 열린다. 일련의 접촉의 성과로 남과 북은 부총리급 인사가 주도하는 경제 협력 기구 구성에 합의하게 된다. 1985년에는 이산가족상봉과 예술가들의 상호 방문이 이루어지는 등 남북 관계에 훈풍이 분다. 남북관계에 유연한 태도를 가지게 된

17) 김근식 외 3인, 『통일·남북관계 사진』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4), 141-142.

18) Young Whan Kihl, "South Korea's Unification Policy in the 1980's," in Tae-Hwan Kwak, Chonghan Kim, and Hong Nack Kim, eds., *Korean Reunification: New Perspectives and Approaches*, 34-36.

19) Jinwook Choi and Sun-Song Park, 앞의 책, 68-69.

김일성은 3자 회담이든 당사자 간의 직접 대화이든 만나자는 의사를 표명하기에 이른다.²⁰⁾

4. 노태우 정부(제6공화국, 1988-1993)

노태우 정부의 통일 정책은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으로 집약된다. 이 방안의 중요한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화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남북 정상 회담을 통해 ‘민족공동체헌장’을 채택하려 한다는 것이다. 즉 화해와 협력을 통한 민족 공동체 형성을 지향한다. 말하자면 이 공동체는 통일의 완성을 앞에 둔 전환기적 시기를 일구어내는 것과 같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일 헌법이 제정되면, 이에 준하여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구성하는 것이다.²¹⁾

이 통일방안의 핵심에는 남과 북 사이에 민족 유대의 회복이라는 목적이 있다. “남과 북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하나의 민족 공동체를 이루고 또 정치적 통합을 위한 조건이 충족될 때 하나의 국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국가 건설은 민족 건설을 통해 성취될 수 있는 것이다.”²²⁾

노태우 정부의 통일 정책은 남북 화해의 진전이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 점에 주목할 만하다. 첫째는 ‘화해,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남북한 기본합의서’에 이른 것으로서, 이는 1991년 12월 제5차 남북한 고위급회담에서 채택되었다. 다른 하나는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다. 전자는 기본적인 남북 관계에 관해 남북한 당국자가 서명한 공식 문서로는 첫 번째라는 데 의의가 있다. 이것은 정치, 군사, 그리고 다방면의 교류와

20) Hakjoon Kim, 앞의 책, 418-421.

21) 김근식 외 3인, 앞의 책, 143-144.

22) Jinwook Choi and Sun-Song Park, 앞의 책, 104.

협력 등 세 가지 중요한 영역에서 남북관계를 다룬다. 후자는 남한과 북한 모두 핵무기나 핵 재처리 혹은 우라늄 가공 시설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규정한다. 뿐만 아니라 이에 한반도가 비핵화 지역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찰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특히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협정에 서명하고 또 사찰단의 북한 핵시설 사찰을 수용하였다.²³⁾ 이러한 일련의 진전은 남북 간에 평화 공존이 공고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했다.

그러나 1992년 북한이 ‘화해,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남북한 기본합의서’를 일방적으로 과기하면서 북한에 대한 불신이 급격히 증대된다. 북한은 1년 후 ‘핵확산금지조약’에서도 탈퇴한다. 이렇듯 북한의 갑작스럽고도 일방적인 조치들로 인해, 평화공존을 목표로 하여 상호간에 맺었던 정치적 약속이나 합의에 대한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

5. 김영삼 정부(문민정부, 1993-1998)

김영삼 정부는 1994년 광복절에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제안한다. 이 방안은 근본적으로 남한 체제가 북한 체제보다 우월하다는 확신에 기초한다. 통일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에 더 비중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어 있다.²⁴⁾

김영삼 정부는 전쟁포로이자 열성적 공산주의자인 이인모를 복송하고 또 식량 지원을 하는 등 북한을 향한 포용적 정책 방향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다.²⁵⁾ 그러나 북한의 전쟁 위협과 다른 적대적 행위들에 직면하면서, 매파적 정책(hawkish policy) 방향을 전체적으로 유지하게 된다. 한 예를

23) 양영식, 앞의 책, 287-302.

24) 김근식 외 3인, 앞의 책, 144-145.

25) 양영식, 앞의 책, 353-355.

들면, 1996년 9월 북한의 잠수함 침투를 명백한 군사적 침략 행위로 규정하고 이 문제를 유엔에 회부하였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볼 때, 김영삼 정부는 북한을 향한 강온 정책을 혼합함으로써 대북 혹은 통일 정책 수립과 실행에서 일관성을 견지하지 못했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²⁶⁾

6. 김대중 정부(국민의 정부, 1998-2003)

김대중 정부가 대북 정책으로 내세운 햇볕정책은 북한이 평화와 개방과 개혁을 향해 점진적이고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적극적이면서도 선제적인 정책이다. 햇볕정책은 이를 위해 화해와 교류협력을 추구한다.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 연설에 이 정책의 세 가지 원칙이 드러나며 거기로부터 구체적 실천 원리들을 추론할 수 있다.

남북문제(南北問題) 해결의 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1991년 12월 13일에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南北基本合意書)의 실천이 바로 그것입니다. 남북 간의 화해(和解)와 교류협력(交流協力)과 불가침(不可侵),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완전한 합의(合意)가 이미 남북한 당국간(當局間)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실천만 하면 남북문제(南北問題)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통일(統一)에의 대로(大路)를 열어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북한(北韓)에 대해 당면한 3원칙(原則)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어떠한 무력도발(武力挑發)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우리는 북한을 해치거나 흡수할 생각이 없습니다. 셋째,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을 가능한 분야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남북간에 교류협력(交流協力)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는 북한이 미국, 일본

26) Kook Shin Kim, "The Kim Dae-jung government and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The Korea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7, 1998 (Seoul: The Korean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1998), 12.

등 우리의 우방국가(友邦國家)나 국제기구(國際機構)와 교류협력을 추진해도 이를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새 정부는 현재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수로(輕水爐) 건설과 관련한 약속을 이행할 것입니다. 식량(食糧)도 정부와 민간이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원하는 데 인색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북한 당국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수많은 이산가족(離散家族)들이 나이 들어 차츰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남북의 가족들이 만나고 서로 소식을 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최근 북한이 긍정적인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점을 예의(銳意)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와 학술의 교류, 정경분리(政經分離)에 입각한 경제교류(經濟交流)도 확대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남북기본합의서(南北基本合意書)에 의한 남북간의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특사(特使)의 교환을 제의합니다. 북한이 원한다면 정상회담(頂上會談)에도 응할 용의가 있습니다.

새 정부는 해외동포(海外同胞)들과의 긴밀한 유대를 강화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는 해외동포들이 거주국 시민(居住國 市民)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면서 한국계(韓國系)로서 안정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돕겠습니다.²⁷⁾

요컨대, 세 가지 원칙을 정리하면, 1)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나 무력 도발에 대한 불관용의 원칙 2) 흡수 통일의 공식적 포기와 북한을 위협하거나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어떤 시도들에 대한 부정 3)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충실한 이행을 통한 교류와 협력 증진이다.

문정인은 이 세 가지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몇 가지 구체적 실천 원리들이 있음을 밝힌다. 첫째, 전략적 선제성이다. 과거 정권들의 대북 정책은 대부분의 경우 북한의 행동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났는데, 이 점이 일관적

27) 김대중 대통령 취임사.

이지 못한 결과를 산출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 이에 반하여 김대중 정부는 주도권을 갖고자 노력함으로써 이러한 대응적 정책 수립과 집행을 고정하려 했다. 북한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하더라도 부단한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포용적 입장을 견지하려고 하였다.²⁸⁾

둘째, 유연한 이원론이다. 포용 전략의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1) “쉬운 과업을 먼저 하고 어려운 과업은 나중에 한다.” 2) “경제가 먼저이고 정치 는 나중에이다.” 3) “비정부 시민단체들이 먼저고 정부는 나중에이다.” 4) “주는 것이 먼저이고 받는 것은 나중에이다.”²⁹⁾ 유연한 이원론의 핵심은 정치와 경제의 분리에 있다. 이전 정부들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정치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다음에 경제에 연결고리를 설정하려 하였다. 과거에 사회, 경제적 차원에서 교류를 통해 남북 관계가 좋아지다가도, 정치적 장애들이 생기거나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생기면, 호전되던 관계가 악화의 길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북한이 정치적으로 혹은 군사적으로 도발해 온다 하더라도, 경제 교류와 협력은 그러한 도발에 상관없이 수행할 것임을 천명함으로써, 관계 악화의 전형적 도식을 깨뜨리려 시도했다.³⁰⁾

셋째, 포용과 안보의 동시 추구이다. 김대중 정부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라는 현실을 예민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안보 강화를 통하여 그러한 위협을 억제하고자 하였다. 김대중 정부는, 포용 정책은 남한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비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

28) Chung-In Moon, “Understanding the DJ Doctrine: the Sunshine Policy and the Korean Peninsula,” in Chung-In Moon and David I. Steinberg, eds., *Kim Dae-jung Government and Sunshine Policy: Promises and Challenges*, 38.

29) Dong-won Lim, “North Korean Policy under the Kim Dae-jung Government,” a speech delivered at a breakfast meeting with the National Reconciliation Council, March 11, 1999, 3.

30) Chung-In Moon, 앞의 글, 39.

이다.³¹⁾

넷째, 국제 공조에 대한 강조이다. 국제 공조는 한반도의 갈등 상황 통제에 유용하고 북한의 연착륙을 돕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다섯째, 국내 의견 일치에의 중요성이다. 박정희 정부의 7.4 공동성명이나 노태우 정부의 화해 분위기 조성 등 같은 진전된 남북 관계는 대개의 경우 당국자간의 비공개 접촉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통일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이 배제되고 당국자들만이 참여하는 엘리트주의로 흐르는 경향이 강했다.³²⁾ 김대중 정부는 남북 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뜻은 전혀 없으며 더 나아가 정책 수립과 집행에서 투명성과 국내의 의견일치를 견지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마지막으로 햇볕 정책은 가상 통일(pseudo-unification)을 상정한다. 남북이 합의와 국민투표를 통해 실질적 통일을 이루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김대중 정부는 가상 통일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 단계에서 인적·물적 자원의 충분한 교류와 남북 간의 신뢰 형성과 군축이 완성을 보게 된다. 가상 통일이라는 개념 안에서 햇볕 정책은 교류와 협력을 통한 북한과의 평화공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³³⁾

III. 거룩한 전쟁, 정당전쟁 그리고 평화주의

1. 십자군에 나타난 거룩한 전쟁

1) 종교적 동기로 수행한 전쟁

에르트만(Carl Erdmann)은 거룩한 전쟁을 “종교적 행위로 여겨지거나

31) 위의 글, 40.

32) 위의 글, 41-42.

33) 같은 글.

어떤 의미에서든 종교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전쟁³⁴⁾이라 정의한다. 이어서 “여기서 종교는 그 자체로 전쟁의 구체적 원인(명분)을 제공하는데, 공공의 복지, 영토 방어, 국가적 명예 혹은 국가의 이해 등을 고려하는 것에 장애받지 않으면서 말이다”³⁵⁾ 라고 하였다.

교황 우르반 2세(Urban II)가 시작한 십자군 전쟁은 종교적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수행한 전쟁이었다. 이 전쟁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동방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를 보호하고 기독교 영토를 회복하는 것이었다.³⁶⁾ 1095년 클레르몽 회의(Council of Clermont)에서 우르반 2세가 한 연설은, 이러한 목적 설정을 분명히 한다.

프랑크족의 사람들이여, 여러분 많은 영토 영역에서, 낮이든 밤이든, 노상의 범법자들 때문에 상해나 물리적 공격을 받지 않고 왕래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집에서조차 안전하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의 선조들에게 하나님의 휴전으로 알려진 법을 다시 실행합시다 여러분 가운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분은 동방에서 여러분의 형제자매를 도와야 하는데, 그들은 저주받은 인종에게 협박받고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려져 있습니다. 우리 주의 성소(holy sepulchre)는 한 부정한 백성의 더러움에 의해 오염되고 있습니다. 성소를 향해 출정합시다. 사악한 사람들에게서 그 땅을 회복하고 여러분에게 속하게 합시다.³⁷⁾

또한 우르반은 십자군 전쟁을 구속적(redemptive)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지금까지 약탈자로 살아왔던 이

34) Carl Erdmann, *The Origin of the Idea of Crusade*, trans. Marshall W. Baldwin and Walter Goffart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7), 3.

35) 같은 책.

36) A. J. Coats, *The Ethics of War* (Manchester/ New York: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7), 106-107.

37) Roland Bainton, 앞의 책, 111-112.

들을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라. 형제와 친지들과 등지고 살았던 이들로 야만인들과 싸우는 의의 군사가 되게 하라. 몇 조각 은을 얻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로 영원한 보상을 위해 투신하게 하라.”³⁸⁾ 십자군의 군사가 되어 신적인 목적을 성취하는데 이바지함으로써, 사회적·영적인 보상을 얻을 수 있다는 소망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사업인 십자군 전쟁에 참전함으로써, 각종 면제와 사죄의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심지어 천국에서 특별한 지위를 얻을 수 있다고까지 선전하였던 것이다. 교황을 비롯한 많은 설교자들이 대중의 마음을 움직였고, 이에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유익’을 기대하며 십자군에 참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은자 피터(Peter the Hermit)의 설교를 듣고 1만 5천여 명이 십자군의 부름에 응답하였다는 일화는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다.³⁹⁾

요컨대, 십자군은 공식적으로 종교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시작되었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베인튼이 지적한 대로, 십자군의 명분은 세속적인 것이어서는 안 되고 거룩해야 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거룩한 목적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수행하는 전쟁이기에, 이 전쟁에서 십자군의 군사들은 거룩하고 그들의 대적은 불경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음도 기억할 만하다.⁴⁰⁾

2) 폭력이 기독교 제자도의 핵심이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기독교 전통에서 전쟁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38) E. Peters, ed., *The First Crusade: The Chronicle of Fulcher of Chartres and Other Source Materials*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71). A. J. Coats, *The Ethics of War*, 107에서 재인용.

39) 최덕성, 『종교개혁전야』 (서울: 본문과현장사이, 2003), 16-19.

40) 위의 책, 148.

지속되었다. 예를 들어, 이교도에 대한 반감은 있었지만, 그들에 대한 전쟁을 수용한 것은 아니었다. 에르트만은, “기독교 세계에 존재한 강한 공동체 의식은 모든 이교적인 것을 거부한 데서 잘 드러난다. 어거스틴의 하나님 왕국과 악마의 왕국 사이의 대조는 인간의 마음 속에 역동하는 것이기도 하고, 때때로 기독교와 이교 사이의 충돌을 표현하기 위해 쓰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이교도를 멸절하거나 회심을 강제하기 위해 이교도에 대한 전쟁을 원했다는 가정은 지나치다. 전쟁에 대한 이러한 모호함 때문에 교회는 이 방향으로(이교를 멸절하거나 회심을 강제하기 위해 전쟁을 선호하는 방향) 가는 것을 꺼려했다”⁴¹⁾고 말한다.

전쟁에 대한 교회의 태도는 전쟁에 관한 부정적 인식과 도덕적 신중함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성직자가 군인이 되는 것을 막았고, 그리고 전쟁에 참가했던 평신도들이 성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참회를 해야 했다. 코우츠(A. J. Coats)는, 이처럼 전쟁을 도덕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자 하는 교회의 입장은 십자군 전쟁을 기점으로 큰 변화를 맞게 되었다 주장한다.⁴²⁾ 십자군은 자신들의 전쟁 수행을 도덕적으로 또 영적으로 우월하다 생각했는데, 세속적 영광이 아니라 종교적 목적을 위해 싸우기 때문이다. 이러한 도덕적 정당화는 전쟁에 대해 신중한 혹은 모호한 입장을 취해 왔던 전통적 흐름과 사뭇 다른 것이다. 코우츠에 따르면, “전쟁의 목적은 (이교도의) 점령지들을 해방시키고 기독교 공동체들을 보호하는 것일 수 있었겠지만, 그것이 갖는 초월적 성격 규정들로 인해 좀 더 제한적이고 온건한 목적들 안에 내포되었던 경계와 통제는 많이 약화되었다. 교황이 전쟁을 정당화함으로써, 전쟁 참여에 대한 유보적 자세를 철회하게 되었고 모든 도덕적 염려를 잠재우며 또 도덕적 의심들을 해소하게

41) Carl Erdmann, 앞의 책, 97.

42) A. J. Coats, 앞의 책, 106.

되었다.”⁴³⁾

십자군이 동방에 도착할 때, 십자군 병사들은 살육의 무리가 되어, 이교도들을 무참히 살해했는데, 그 가운데는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베인튼은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했을 때 일어난 일을 극적으로 기술한다.

우리 십자군 병사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들은 좀 더 자비로웠다) 적들의 머리를 절단했고 다른 병사들은 화살을 쏘아 적들을 탑에서 떨어져 죽게 했다. 또 다른 이들은 적들을 불꽃 가운데 집어넣어 고문을 오랜 시간 계속했다. 시체의 잘린 목, 손 그리고 발 더미들이 거리에 가득했다. 사람들과 말들의 시체가 너무나도 많이 깔려 있어 길을 내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그러나 솔로몬 성전에서 일어난 일에 비하면 이것은 작은 일이다... 솔로몬 성전에서는 무릎까지 차오르는 피의 강을 헤쳐 가야 했다. 이는 실로 하나님의 정의롭고 위대한 심판이시다. 그동안 성전이 겪어야 했던 불경스러운 상황을 생각하면, 이곳은 불신자들의 피로 가득해야만 한다.⁴⁴⁾

여기에 잘 드러나는 것처럼, 어거스틴이나 루터가 전쟁이나 살인을 정당화할 때 보여준 신중하고도 조심스러운 어조나 분위기는, 십자군에서는 찾을 수 없다. 거룩한 전쟁은 절제 혹은 통제(restraint)를 거두어 버리는 경향이 있다. 카힐(Lisa S. Cahill)은 십자군은 폭력을 기독교 제자도의 핵심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해석한다. “십자군은 그때까지의 전통에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 내었는데, 폭력을 (특히 살인을) 신실한 제자도의 주변이 아니라 중심에 위치시켰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들은 교회의 이익을 위한 방어적 폭력을 공격적으로 이해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했으며, 성직자를 단

43) 위의 책, 108.

44) *Historia Francorum*, trans. Frederick Duncalf and August C. Krey, *Parallel Source Problems in Medieval History* (New York: Harper & Brothers, 1912). Roland H. Bainton, *The Christian Attitudes Toward War and Peace*, 112-113에서 재인용.

순히 영적인 기사가 아니라 실제적인 군사로 편입시켰다. 그리고 전쟁의 보상으로 영원한 상급을 덧붙였다.”⁴⁵⁾

3) 배타적 사랑

어거스틴이 강제력 혹은 폭력 사용을 정당화할 때 제시한 가장 중요한 근거는 이웃 사랑이다. 불의한 침략자의 위협 앞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무고한 이웃을 구하기 위해 무기를 드는 것은 사랑의 행위라고 보았던 것이다. 십자군의 경우에도 이웃 사랑의 동기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이웃 사랑은 “같은 민족이나 친족 관계 혹은 종교적인 유대 등의 이유가 있어 동료를 사랑한다는”⁴⁶⁾ 의미에서 제한적이다. 라일리-스미스(Riley-Smith)에 따르면, 교황 우르반은 적에 대한 사랑보다는 기독교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과 그들을 구하기 위한 희생을 강조했다.⁴⁷⁾ 십자군의 사랑은 보편적 사랑이라기보다는 배타적 사랑 곧 위기에 처한 동료 기독교인들을 향한 제한적 사랑이었다.

2. 루터와 칼빈의 정당전쟁론

1) 군사력을 사용하는 세속 정부의 권위와 정당성의 문제

루터는 영적 정부와 세속 정부를 구분한다. 영적 정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자들로 이루어진다. 반대로 세속 정부는 참된 신자들을 제외한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 정부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들로 법에 복종하게 하셔서, 악행이 제어되고 평화와 질서가 유지되게 하시는 것이다

45) Lisa Sowle Cahill, 앞의 책, 125.

46) 위의 책, 129.

47) Jonathan Riley-Smith, *The First Crusade and the Idea of Crusading* (London: Athlone Press, 1986), 27.

달리 말해 세속 정부는 공적 평화를 유지하고 악행을 통제하며 또 죄의 결과들을 치유하기 위해 존재한다. 베인튼은 루터가 엄격하게 구별되는 두 개의 도덕을 - 하나는 교회의 것이고 나머지는 국가의 것이라는 식의 - 제시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루터의 전쟁 이해 곧 세속 정부가 수행하는 정당한 전쟁에 대해 기술한다.

[루터]는 두 가지 별개의 윤리를 생각하지 않으며, 둘 또는 그 이상의 행동 수칙(code)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점에서 루터는, 어거스틴이 전쟁에 관하여 통치자, 관리, 성직자, 시민 등 네 부류를 위해 제시한 4가지 수칙을 단 순화해서 말하고 있다고 하겠다. 루터는 성직자를 전쟁의 책임에서 제외하고, 다른 세 부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통치자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도구이다. 그는 자신의 과업을 깊은 슬픔으로 수행하는데, 관리는 그 슬픔을 느낄 필요가 없을 것이다. ‘경건한 재판장은 죄인에게 형벌을 가하면서 괴로워할 것이며, 법이 사형을 집행한다면 그 죽음으로 인해 깊은 슬픔에 잠길 것임을 우리는 안다. 이러한 과업은 겉으로 보기에는 분노로 가득하고 무자비하지 않으면 수행할 수 없는 일 같지만 무자비해 보이는 그러한 과업에도 온유함이 머물러 있고, 또 단호하게 실행해야 한다 하더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온유함이 흘러 나와야 할 것이다[WA 6, 267].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 번 비통에 찬 어거스틴적 통치자를 만난다. 바로 앞의 루터 인용은 분명히 재판관에 대한 것이지만, 이는 군인에게도 적합하다. 왜냐하면 루터는 어거스틴과 마찬가지로 전쟁을 국가의 경찰 기능의 한 측면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⁴⁸⁾

하나님의 도구로서 정치 지도자들은 ‘칼을 들 수 있는’ 정당한 권위를 부여받는다. 그들이 지켜야 할 수칙(code)에 따르면, 평화의 유지와 회복, 불의한 폭력으로부터 무고한 시민들의 보호 등과 같이 정당한 사유로 강

48) Roland H. Bainton, 앞의 책, 138-189.

제력 혹은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루터는 자국민을 외적의 공격에서 보호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세속 정부가 수행하는 전쟁을 불가피하고도 합법적인 기능 수행으로 이해한다. “군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서 루터는 이 점을 밝힌다. “잘못과 악을 징벌하는데 전쟁 외에 다른 무엇이 있겠는가? 평화를 갈망하기 때문이 아니고서 누가 전쟁에 나아가겠는가?”⁴⁹⁾ 또한 이러한 세속 정부의 정당한 전쟁 수행을 사랑의 윤리 관점에서 설명한다. 이에 관한 루터의 주장을 들어 보자. “기독교인들도 칼의 힘(무력)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인데, 그리하여 이웃을 섬기며 악한 이들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악에 저항하지 말라는 주님의 계명은 여전히 유효하기에, 기독교인이 칼을 들어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다 할지라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나 복수를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고, 타인들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칼을 들어 온 공동체를 방어하고 보호하며 또 백성이 유린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기독교 사랑의 일이다.”⁵⁰⁾ 이 인용에서 루터가 ‘온 공동체를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하고 기독교 사랑에 상응하는 것으로 본다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칼빈은 전쟁 시작 전에 숙고해야 할 정의의 기준들의 관점(*jus ad bellum*)에서 루터와 전체적으로 동의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전쟁에 참여하는 전쟁 수행자들이 지켜야 할 정의의 기준들의 관점(*jus in bello*)에서는 몇 가지를 지적한다. 특별히 전쟁 수행자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절제와 인도주의적 감정을 가지라고 권고한다. 무력 사용을 지휘하는 지도자들은 사적인 감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건잡을 수 없는 분노나

49) Martin Luther, “Whether Soldiers, Too, Can Be Saved,” in Jaroslav Pelikan, ed., *Luther's Works* 46 (Saint Louis: Concordia, 1955), 95.

50) Martin Luther, *Sermons on the First Epistle of St. Peter*, in Jaroslav Pelikan, ed., *Luther's Works* 30, 76.

증오 혹은 잔혹함에 빠지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한다.⁵¹⁾ 또한 “사랑의 법에 따라서, 적군이라 하더라도 투항하여 자비를 구하면 살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⁵²⁾고 주장한다. 요컨대, 칼빈의 정당전쟁론은 그 핵심에 동료 인간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정당한 전쟁은 무고한 이웃을 보호하기 위해 수행되어야 하는 한편, 전쟁 수행 과정에서는 ‘사랑의 법’을 따라 최대한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과 애정을 견지해야 한다.

2) 방어 전쟁의 정당화와 ‘마지막 수단으로서 전쟁 수행’이라는 기준

루터는 오직 방어 전쟁을 허용한다. 그는, “정신 나간 군주가 머리 속에 전쟁을 기획하고 시작하는 것은 옳지 않다. 무엇보다도 전쟁을 시작하는 그 사람이 잘못했으며 또 칼을 빼든 그 사람은 결국 패배하고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⁵³⁾ 라고 하였다.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권위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세속 정부에게 ‘평화를 깨고 전쟁을 시작할’ 권위를 주신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유지하고 침략군을 제어하기 위해’ 전쟁을 수행할 권위를 주신 것이다.⁵⁴⁾ 아울러 정당화될 수 없는 전쟁의 동기 몇 가지를 소개하는데, 이기적 동기,⁵⁵⁾ “돈에 대한 욕심,”⁵⁶⁾ “명예 혹은 영광에 대한 탐심”⁵⁷⁾ 등이 그것이다.

방어 전쟁에 대한 루터의 정당화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전쟁 수행’이라

51) Jea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Vols. I, II., ed. John T. McNeill and trans. Ford Lewis Battles (Philadelphia: Westminster, 1960), IV.20.12.

52) Jean Calvin, *Harmony*, Vol. 3, p. 53. David F. Wright, “War in a Church-Historical Perspective,” *Evangelical Quarterly*, vol. LVII no. 2, April 1985, 160에서 재인용.

53) Martin Luther, “Whether Soldiers, Too, Can Be Saved,” 118.

54) 같은 글.

55) 위의 글, 113-118.

56) 위의 글, 131-132.

57) 위의 글, 132-135.

는 또다른 정당전쟁 기준을 내포한다. 군사력을 사용하기 전에 가능한 평화적 수단을 다 써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본 대로, 전쟁을 시작하는 이들은 불의하고 옳지 않다. 몇몇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⁵⁸⁾ 루터는 하나님의 백성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협상에 나서야 하며 적들과 의견 일치에 이르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이 아모리와 가나안 왕국들에 먼저 평화를 제안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에게 먼저 싸움을 걸어 전쟁을 하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계명이 확증될 것이다.”⁵⁹⁾ 만일 협상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누구든지 부당하게 공격당하는 쪽은 방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

칼빈은 정당한 방어 전쟁을 ‘필수적인 것으로 본다. 정치 지도자들이 자국민과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 외부의 침략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고 칼빈은 주장한다.⁶⁰⁾ 칼빈에게 이러한 전쟁 수행은 ‘필연적인(필수적인)’ 것이다. 불의한 침략에 대응하여 평화를 이루는 것이 전쟁 수행의 본질적 목적이라면 그 전쟁은 정당하다. 정치 지도자는 ‘극한의 필요에 의한 것’(by extreme necessity)이 아니라면 전쟁에 나가서는 안 된다. 또한 루터와 마찬가지로, 극한의 필요라는 조건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전쟁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고 역설한다.⁶¹⁾

3) 정당전쟁의 경우에도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약탈하고 살인하는 농민들에 대하여”에서, 루터는 정치 지도자들이 농민들을 징벌해야 하는 이유를 말하면서 동시에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에

58) 민 21:22 이하; 신 2:26 이하; 민 14:45; 왕하 14:8 이하; 왕하 22:2 이하; 사 12:6; 왕하 23:29. 위의 글, 120.

59) 같은 글.

60) Jean Calvin, 앞의 책, IV,20,11.

61) 위의 책, IV,20,12.

달려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도자가 기독교인이고 복음을 수용하고 있다면... 그 지도자는 두려움으로 일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 먼저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데, 우리가 이 모든 일을 겪을 만하다고 고백하고 또 아마도 하나님이 온 독일에 형벌을 가하시려고 이 악마를 일으키셨을 지도 모른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말이다.”⁶²⁾ 그러므로 정치 지도자들은 지금 불가피한 의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로 전쟁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승리가 결코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결과는 하나님 손에 맡겨야 한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고, 이를 놓고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에 대한 루터의 말을 들어 보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것 혹은 저것을 맡기셨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여러분 자신의 지혜와 능력에 의지해서 그 어떤 것도 하라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두려움과 겸손으로 맡기신 일을 수행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행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기를 바라시는데, 이는 그리하여 우리가 교만해지거나 그의 도움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다.”⁶³⁾

3. 에라스무스의 평화주의

1) 인간은 본성적으로 평화를 추구한다

기독교인이면서 동시에 르네상스 인문주의자였던 에라스무스는 개혁가로서 성서와 교부들 뿐 아니라 고대의 고전들에도 의존했다. 카힐에 따

62) Martin Luther, “Against the Robbing and Murdering Hordes of Peasants,” in Jaroslav Pelikan, ed., *Luther’s Works* 46, 52.

63) Martin Luther, “On War Against the Turk,” in Jaroslav Pelikan, ed., *Luther’s Works* 46, 190-191.

르면, 에라스무스의 과업은 “기독교 전통 전체를 정화하기 위해 최상의 인문주의 산물을 핵심적 기독교 교리들에 적용하는 것”⁶⁴⁾이었다. 그의 개혁의 중요한 한 주제는 강제력의 정치적 사용에 대한 평화주의적 반대였다. 베인튼은 에라스무스에 대해 “평화는 교육을 통해 교회와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그의 기획에 필수적인 것이었다”⁶⁵⁾라고 적고 있다.

에라스무스의 평화 옹호는 무엇보다도 자연 질서에 의존한다. “모든 동물이 싸움을 즐겨하지 않는데, 심지어 야수들도 그렇다. 같은 종류의 동물들끼리 싸우지 않을 뿐더러, 다른 종족들과도 싸우지 않는다. 자연이 그들에게 허락한 무기들을 가지고 싸우지, 악마적 과학이 만들어 낸 기계들을 가지고 싸우는 우리와 같지 않다. 동물들은 고상한 명분을 가지고 싸우지 않는다. 그저 필요한 먹이를 구하고 어린 생명들을 지키기 위해 싸울 뿐이다. 반면 인간의 전쟁은 야망과 탐욕, 그것이 아니면 내면의 병적 역동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다.”⁶⁶⁾ 인류에게 전쟁은 그야말로 ‘자연스럽지’(natural) 않은 것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움’은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다.

에라스무스는 인간의 몸(육체)의 조직과 외형을 세밀하게 관찰한다면, 그것이 전쟁이 아니라 사랑과 우정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라 강조한다. ‘서로를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 섬기고 서로의 안전을 도모하며, 서로에게 상해를 입히기 보다는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데’ 적합한 몸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자연의 질서 혹은 창조의 질서이다. 인간의 몸에서 물리적 싸움이나 폭력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⁶⁷⁾ 도리어 인간의 몸은 평화와 사랑

64) Lisa Sowle Cahill, 앞의 책, 153.

65) Roland H. Bainton, 앞의 책, 131.

66) Desiderius Erasmus, “Letter to Antoon van Bergen,” lines 30-35. James Turner Johnson, *The Quest for Peace: Three Moral Traditions in Western Cultural History*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7), 155에서 재인용.

을 실천하기에 적합하다. 자연은 인간에게 풍부한 감성을 전달 수 있는 눈을, 동료 피조물들을 따뜻하게 품어 안을 팔을, 마음과 영혼의 연합의 메시지를 표현할 입술을 허락했다고 강조한다.⁶⁸⁾

몸의 외적 측면 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인간은 평화 친화적으로 창조되었다. “자연은 인간의 마음 속에 배타적 삶을 혐오하고 함께 어울려 사는 삶을 사랑하는 지향성을 심겨 두었다. 또한 인간의 심장에 온통 자애로운 애착의 씨앗을 뿌려 놓았다.”⁶⁹⁾ 인류는 이렇듯 평화로운 공존을 향한 본능적 지향을 내재적으로 간직하고 있기에, 전쟁과 같은 상호 파괴적 갈등은 분명히 본능을 거스르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즉 인간 본성의 설계도에는 ‘상호간의 친밀한 감정적 교류와 사랑과 우정의 애착 관계의 인자가 심겨 있다고 보는 것이다.’⁷⁰⁾ 요컨대, 에라스무스는 창조의 질서 혹은 자연의 질서에 빗대어 인간은 본성상 평화로운 공존과 상호 의존에 기반한 우정과 사랑을 발전시키기 위해 창조되었다고 주장한다

2) 평화의 추구는 기독교 제자도의 핵심이다

에라스무스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오직 소수의 기독교인들만이 복음의 이상을 완수할 수 있다는 기독교 엘리트주의를 배격한다.⁷¹⁾ 평화와 사랑에 힘쓰라는 복음서의 많은 권고들을 무시하는 것은 과히 불가능한 일일 것이라고 강조한다. 다음 인용들은 전쟁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에

67) Desiderius Erasmus, “Antipolemus; Or the Plea of Reason, Religion and Humanity Against War” (1813), reprinted in *The Book of Peace: A Collection of Essays on War and Peace* (Boston: George C. Beckwith, 1845). <http://mises.org/daily/4134>.

68) 같은 글.

69) 같은 글.

70) 같은 글.

71) Lisa Sowle Cahill, 앞의 책, 154.

라스무스의 입장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어디에서 그토록 많은 완벽한 일치의 맹세들을, 그토록 많은 평화의 교훈들을 찾을 수 있을까? 그리스도가 스스로 자신의 것이라 부른 바, 하나의 계명 곧 사랑의 계명이 있다. 무엇이 이보다 더 전쟁을 반대할 수 있을까? 예수는 그의 친구들을 복된 평화의 인사로 맞이한다. 제자들에게 오직 평화를 주었고, 오직 평화만을 남기셨다.⁷²⁾

오직 온유만을 설교하시고 또 행하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며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 부르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우리에게, 한 몸으로 부름받아 한 성령으로 살고 동일한 성례 가운데 자라가며 또 한 머리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도대체 그 무엇이 우리로 전쟁에 동참하라고 할 만큼 중요하다는 말인가?⁷³⁾

여기서 우리는, 에라스무스에게 있어서는 평화의 추구가 참된 기독교인의 근본적인 의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수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드는 이라면 오직 평화와 사랑으로 말하고 또 살 수 밖에 없으리라는 것이다. 에라스무스는 또한, 예수는 그렇게 가르친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몸소 사셨고 따르는 이들에게 그러한 삶을 ‘배우라’고 명하셨음을 강조한다. 그리스도가 ‘길ियो 진리요 생명’임을 인정한다면 기독교인의 윤리적 삶이 그의 가르침과 모범과 달라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은 사랑 자체이시며 사랑과 평화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가르치지 않으신 ‘그리스도의 본’을 삶의 구석구석에서 구현해야 한다고 권면한다. 요컨대, 에라

72) Desiderius Erasmus, *Dulce bellum in expetis* in *The ‘Adages’ of Erasmus*, trans., Margaret Mann Phillips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4), 327.

73) Desiderius Erasmus, “Letter to Antoon van Bergen,” lines 38-44. James Turner Johnson, *The Quest for Peace*, 157에서 재인용.

스무스는 평화의 추구를 기독교 제자도의 핵심으로 옹호하고 있는 것이다.⁷⁴⁾

3) ‘정당한 전쟁’은 불가능하다

존슨(James T. Johnson)에 따르면, 에라스무스는 두 가지 의미에서 정당전쟁의 불가능성을 말한다. 곧 전쟁이 야기하는 악한 결과들과 전쟁을 수행하는 지도자들의 사악한 동기가 그것이다. 특히 정치 지도자들의 전쟁에 대한 관점의 측면에서, 에라스무스는 마키아벨리적 입장에 극명한 반대를 표명한다. 마키아벨리적 입장은 지혜로운 군주라면 분쟁에서 철저히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고,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삼아 전쟁 수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에라스무스는 이러한 형태의 자기 이익의 추구는 개탄해야만 할 일이라 생각한다.⁷⁵⁾

에라스무스는 “평화의 탄식”에서 전쟁 수행의 정당한 동기는 도무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전쟁의 불의한 동기들을 나열하면서, 에라스무스는 기독교 군주들에게 공동의 선을 추구하라고 권고한다. “기독교 군주들이 전쟁을 선동할 때 드는 헛되고도 피상적인 이유들을 생각하면 부끄러울 따름이다.... 또 어떤 이는 이웃하고 있는 동맹에게 작은 실수라도 있지 않은지 살살이 뒤지기도 하고, 타인의 아내를 넘보아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⁷⁶⁾ 에라스무스는 기독교 정치 지도자들조차 이처럼 정당하지 못한 동기들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을 한탄한다. 에라스무스에 따르면, 전쟁의 가장 심각한 범죄적 원인은 “권력을 탐하는 것이다. 어떤 군주들은 평화

74) Desiderius Erasmus, “Antipolemus; Or the Plea of Reason, Religion and Humanity Against War” (1813).

75) James Turner Johnson, 앞의 책, 159-160.

76) Desiderius Erasmus, *The Complaint of Peace*, in John P. Dolan, trans., *The Essential Erasmus* (New York: Mentor-Omega Books, 1964), 188.

정착이 자신들의 존재가 더 이상 필요치 않은 징표라고 여기기 때문에, 권력에서 멀어진다고 느끼면 권력을 유지하고 백성을 억압하기 위해 전쟁을 조장한다.”⁷⁷⁾ 이와 같이 정치 지도자들이 사익을 위해 전쟁을 악용하는 한, 에라스무스는 전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전쟁을 추구하면, 백성은 평화로운 사회를 도무지 찾을 수도, 누릴 수도 없게 되기 때문이다.

4. 세 가지 유형들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의 관점에서 통일 정책을 평가할 때, 윤리적 분석을 위한 두 가지 초점은 군사력 사용에 대한 입장과 한반도에서 평화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 두 초점은 전쟁과 평화에 관한 이론의 세 가지 유형을 개념화하는 데 사용할 기준이기도 하다. 여기에서는 먼저 지금까지 살펴 본 바에 근거하여 전쟁과 평화에 관한 이론의 세 가지 유형을 기술할 것이다. 특히 거룩한 전쟁의 경우, 그것의 종교적 신념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려 한다. 다시 말해 십자군 전쟁에 담긴 정치적이고 윤리적인 함의를 추적할 것이다.

1) “거룩한 전쟁 유형”

가) 군사력은 특정한 이념적 확신을 보존하고 확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적대하는 쪽을 싸워 이겨야 한다. 영토의 확장을 중요한 목적으로 삼기도 한다.

나) 전쟁은 마지막 수단이 아니어도 무방하다. 오히려 목적 완수를 향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선호하는 전쟁의 형식은 침략

77) 같은 책.

전쟁이다.

다) 폭력을 통하여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평화를 이루는 길이다.

라) 타자에 대한 관심은 동료에 대한 사랑으로 제한되는데, 이러한 사랑은 같은 민족이나 동일한 이념 혹은 종교적 신앙을 공유하는 이들에게만 향한다.

2) “정당전쟁 유형”

가)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고 무고한 시민을 보호하며 평화와 질서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한다.

나) 전쟁 수행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 군사력을 쓰기 전에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평화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다) 폭력 사용의 원인 혹은 의도가 정당해야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군사력을 사용하는 원인이나 의도가 갖는 정당성에 대한 확신이 절대적일 수는 없다.

3) “평화주의 유형”

가) 전쟁은 본질적으로 인간 본성에 배치된다. 인간은 평화롭게 공존하며 우정과 사랑을 증진하도록 창조되었다.

나) 전쟁에서 정의로운(just) 동기를 찾는 것은 불가능한데, 전쟁이 야기하는 악한 결과들과 결정권자의 정당치 못한 동기 때문이다.

다) 정치적 권위들은, 모든 경우에 화해를 이루기 위한 협상이나 중재 등의 평화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IV. 세 가지 유형의 관점에서 역대 정부의 통일 정책 평가하기

1. 이승만 정부(제1공화국, 1948-1960)

이승만 정부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거룩한 전쟁 유형”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북한을 평화공존의 대상으로 여기기보다는 대결과 극복의 대상으로 여기는 듯하다. 이념적 지향을 분명히 갖고 있으며, 이 정부는 전쟁을 수행해서 통일을 이룰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이것은 ‘북진과 ‘멸공’ 등의 개념에서 잘 드러난다.

2. 박정희 정부(제3,4공화국, 1962-1979)

박정희 정부의 통일 정책은 이승만 정부의 그것만큼 공세적이거나 대결적이지는 않지만, 이 역시 북한 공산 정권의 극복을 추구한다. 근본적인 정책인 ‘선건설 후통일’ 정책은 이른 바 승공 통일을 지향하는데, 이러한 통일은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등의 영역에서 북한을 앞서 나감으로써 이루어질 것이다. 통일을 위해 군사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선제적 공격을 통해 통일을 추구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 둔다. 이 점에서, 이 정부의 통일 정책을 잠재적 “거룩한 전쟁 유형”의 정책이라 일컬을 수 있을 것이다.

박정희 정부의 정책은 분명히 “평화주의 유형”과는 다르다. 장면 정부(제2공화국)는 여러 분야에서 남북 교류를 시도하고 또 궁극적으로 평화로운 통일을 추구했다. 반대로, 박정희 정부는 장면 정부 때 잠시나마 활발하게 성장했던 통일 운동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억압했다. 1960년대 후반 북한 무장 게릴라의 침투 등과 같은 군사적 행위들은, 통일 운동을 “평화주의 유형”의 방향으로 전개하는 것을 배제하도록 정책적 방향을 잡게 한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1970년대 초, 국제 질서의 변화와 발맞추어, 남과 북의 관계에도 훈풍이 불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긍정적 변화는 통일 운동에 의미 있는 밑거름을 제공했다. 남과 북은 역사적인 '7.4 공동성명'에서 통일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하는데, 이는 자주, 평화 그리고 민족대단결이라는 공동의 원칙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이 원칙들은 본래적으로 군사력을 통한 통일을 시도할 배제하며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이라는 굳건한 기반 위에서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궁극적인 목적의 측면에서 보면, 이 선언은 "평화주의 유형"의 시각으로 통일을 보고 추구하는 강한 경향성을 반영한다 하겠다. 다시 말해, 남과 북은 어떤 경우에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화해와 통일에 이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미국과 소련의 관계 악화가 남과 북의 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것은 남과 북이 7.4 공동성명을 각기 다르게 해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의 해석은 1964년 김일성의 '3대 혁명역량강화 계획'을 직접적으로 반영한다. 김일성의 계획은 남한의 전복이다. 이 계획은 나라 안팎에서 혁명 역량을 강화하여야만 이루어질 것이다. 무력을 통해서라도 상대방을 넘어서려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평화가 온다고 믿는 점 또 이념의 확산을 중요한 목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북한의 해석은 "거룩한 전쟁 유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남한은 '자주의 원칙'을, 통일을 성취하기 위해 남과 북이 직접적인 교류를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북한은 미군의 남한 주둔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미군의 남한 주둔은 명백하게 이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남북은 해석의 차이를 보이는데, 남한은 미군의 남한 주둔을 문제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평화를 유지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남한의 이러한 이해는 "정당전쟁 유형"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남한을 군사력으로 전복하고자 하는 의도를 버리지

않는다면, 남한은 북한의 위협에 직면하여 남한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대응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개념적으로 보았을 때, 상호 불가침 조약(‘평화의 원칙’)을 통한 평화공존과 원래는 한민족인 남과 북이 이념적, 체제적 차이를 초월하려고 한 시도(‘민족대단결의 원칙’)는 “평화주의 유형”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3. 전두환 정부(제5공화국, 1980-1987)

전두환 정부는 북진 통일과 같은 공세적인 정책을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북한 공산주의에 대하여 남한의 이념적 우월성을 확고히 함으로써 통일에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확신에 대북 정책의 뿌리를 둔다. 여기에는 분명히 “거룩한 전쟁 유형”의 동기가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 초기에 발표한 정책 중에는 남북 간의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물론 실행은 다른 문제였다) 것들이 있다. 남북 정상 회담 제안은, 만일 성공했다면, 둘 사이의 관계 개선에 획기적 계기를 제공했을 것이다.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에는 통일 헌법을 제정하는 협상위원회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책임 있는 당국자들의 참여와 같은 평화적인 방법을 통하여 정치적으로 통일에 접근한 사례이다. 이어서 평화공존의 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해 제안한 남북관계기본합의서는 모든 분쟁의 평화적 해결, 국내 문제 불간섭, 상호평등의 원칙에 근거한 상호 관계 유지 등을 그 방책으로 한다. 이러한 정책적 시도들은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평화적 방법들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평화주의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4. 노태우 정부(제6공화국, 1988-1993)

노태우 정부의 통일 정책은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으로 집약되는데,

이는 두 가지의 중요한 단계를 밟는다. 앞에서 본 대로, 첫 번째 단계는 대화, 교류, 협력을 통해 상호신뢰와 평화공존을 회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평화공존이 남과 북 사이에 뿌리를 내리면 그 다음 단계는 민족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그 핵심에는 민족적 유대의 회복이 자리 잡고 있다. 원칙적으로 이 방안은 평화적 방법을 통한 통일을 추구하고 폭력적, 군사적 방법의 채택을 분명히 배제한다. 이 정책의 특기할 만한 점은 통일 운동 과정에서 민족적 유대의 회복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했다는 것이다. 공동체적 유대의 강화라는 목표 설정은 “평화주의 유형”의 전제를 상기시킨다. “평화주의 유형”에서 인류는 평화롭게 공존하도록 창조되었고, 상호간의 사랑과 우정을 발전시키는 지향성은 인간 본성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상황에서 본다면, 민족적 유대의 추구는 “거룩한 전쟁 유형”의 배타적 사랑을 극복하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한과 북한 간의 이념적 대립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노태우 정부가 도출한 두 가지 공식 합의서인 ‘화해,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남북한 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은 남북 관계의 진전에 중대한 기여를 한다. 이 두 합의서의 실천은 평화공존의 강화에 이바지하였으며, 특히 후자는 한반도에서 핵의 위협을 제거하는 목표를 가진다는 면에서 더욱더 그러하다. 이 합의서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 폭력적 혹은 군사적 수단의 사용을 정당화하는 입장에서(“거룩한 전쟁 유형” 혹은 “정당전쟁 유형”) 군사력 사용의 역할을 포함하는 평화적 방법을 가장 효과적인 통일 전략으로 상호 인식하는 입장으로(“평화주의 유형”) 그 방향을 바꾸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남북 관계에 의미 있는 전환을 일구어내었다.

5. 김영삼 정부(문민정부, 1993-1998)

앞에서 본 것처럼, 김영삼 정부는 이인모 노인의 석방과 같은 포용 정책을 채택했다. 당시 이인모의 석방은 인도주의적이고 이념적인 측면에서 실로 혁명적인 사건이었다. 이인모의 석방은 그의 이념적 선호를 인정함으로써 이념적 차이를 수용할 여지를 남겨두는 상징적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김영삼 정부는 평화공존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아갔다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전쟁 위협과 일련의 적대적 행위의 도발은 김영삼 정부로 하여금 대북 정책의 포용적 방향을 재검토하게 하고, 결국 강성 정책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 김영삼 정부는 북한의 잠수함 침투 문제를 유엔으로 가져가는데, 이는 북한의 무력 위협과 실제적 침략 행위에 대해서는 무력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김영삼 정부의 통일 정책은 “평화주의 유형”과 “거룩한 전쟁 유형” 사이를 오가는 어떤 지점을 점한다 할 수 있겠다.

6. 김대중 정부(국민의 정부, 1998-2003)

김대중 정부는 포용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했다. 김대중 정부가 기치로 내건 햇볕정책은 북한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고자 입안된 것으로서, 화해와 교류협력을 참을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북한이 개방과 개혁으로 전진하도록 돕고자 하였다. 햇볕정책의 세 가지 원칙을 다시 생각해 보면, 첫째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는 관용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둘째는 흡수 통일 의도의 공식적 폐기이며, 셋째는 1991년의 화해, 불가침 그리고 교류와 협력에 관한 기본 합의서 실행을 통한 교류와 협력 증진이다.

세 원칙을 기독교 전쟁과 평화의 전통에서 각각 분석해보면, 우선 첫

번째 원칙은 “정당전쟁 유형”의 특징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남한 국민이 북한의 분명한 위협에 노출될 때, 안전 보장을 위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북한의 위협이 상존한다는 것을 인정하며, 안보 강화를 통해 기꺼이 그러한 위협을 제어하고자 한다. 안보의 강화가 효과적인 포용 정책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것임을 김대중 정부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원칙은 “거룩한 전쟁 유형”과는 명백하게 양립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념적 또는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의 극복이나 제압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원칙은 “평화주의 유형”을 반영하는데, 정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평화적 방법을 통해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요컨대, 김대중 정부의 통일 정책은 “평화주의 유형”에 매우 가깝다 하겠다. 그러나 동시에, 안보적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당전쟁 유형”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1998년 북한의 일련의 도발에 직면하여 햇볕정책이 시험대에 오르기도 했지만, 이 상황에서도 김대중 정부는 햇볕 정책의 기초를 지속적으로 유지했다.

가상 통일(pseudo-unification) 원칙의 관점에서 “평화주의 유형” 친화성을 찾을 수 있다. 인적, 물적 자원이 활발히 교류되고 동시에 상호 신뢰와 균축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상황을 가상 통일 상황이라 보고, 이를 추구했던 것이다. 특별히 이산가족에 대한 인도주의적 관심과 실천은 이 가상 통일을 정당화하는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다.

V. 결 론

지금까지 필자는 기독교 전쟁과 평화 전통의 세 가지 유형과 이에 근거하여 역대 정부들의 통일 정책을 살펴보았다. 결론에서 필자는 기독교 전쟁과 평화 전통에 의존하지만, 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으면서, 기독교 전쟁과 평화 전통의 관점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이 제안들이 남북 간의 긴장 완화와 평화 공존을 증진하는 데 건설적으로 기여 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필자의 제안은 루터와 칼빈의 정당전쟁론과 에라스무스의 평화주의를 긍정적인 시각에서 활용한 윤리적 제안이 될 것이다. 한편, 십자군 전쟁을 중심으로 살펴본 거룩한 전쟁 전통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거룩한 전쟁 유형”에 친화적인 통일 정책은 통일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적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에 배치되기에, 거룩한 전쟁의 전통에 대해서는 비판적 성찰이 요구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첫째, 정부의 권위와 군사력 사용의 정당성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정부는 안전을 보장하고 무고한 시민들을 보호하며 평화를 유지, 회복하기 위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포용과 안보는 함께 가야 한다. 효과적인 포용 정책은 전쟁 억제를 위해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을 때 가능하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대로, 무력을 쓰기 전에 가능한 한, 모든 평화의 수단들을 동원해야 한다.

대부분의 역대 정부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비는 남북 관계 혹은 통일 문제를 국내 정치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른바 ‘북풍’으로 규정되는 북한 관련 정치 행위를 그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군사적 긴장을 의도적으로 조성하거나, 북한이 야기한 긴장을 활용하면서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였던 것이

다. 그런데 이러한 정치적 행위가 장기적으로는 남북 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⁷⁸⁾ 정치 지도자들이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주어진 강제력 혹은 폭력을 사용하려고 할 때, 그 정당성을 해치지 않아야 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오용하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 다시, 가장 불의한 전쟁의 이유는 권력에 대한 욕구라는 에라스무스의 비판적 성찰을 되새길 필요가 있겠다. 또한 루터가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속 정부에게 허락하신 바,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정당한 사유들 곧 평화를 유지하거나 무고한 시민들을 보호하는 일 등에 제한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통일의 방식에 관한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부분의 정부들은 기본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 학문 등 여러 분야에서 북한보다 우월한 위치를 차지함으로써 통일에 이르러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아시아 태평양 안보 연구원은 1998년에 한반도 화해의 시나리오에 초점을 두고 국제 정치 군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이 시뮬레이션의 중요한 발견 가운데 하나는, 화해에 진전이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한과 북한 사이에 존재하는 제로섬(Zero-sum) 사고방식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⁷⁹⁾ 매닝(Robert A. Manning)은 “미국과 남한은 북한이 흡수 통일에 대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잠재울 방법을 찾아야 한다”⁸⁰⁾고 주장하였다.

78) Chung-In Moon, 앞의 글, 41-42.

79) “International Game 1998: Exploring Reconcili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Report of the Asia Pacific Center for Security Studies, Honolulu, Hawaii, April 27, 1998. H. C. Stackpole and Jin Song, “Kim Dae-jung’s Sunshine Policy and the Korean Peace Process,” *The Korea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7, 1998 (Seoul: The Korean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1998), 47에서 재인용.

80) Testimony by Robert A. Manning, Senior Fellow, Progressive Policy Institute, before the House International Relations Asia and Pacific Subcommittee hearing on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February 26, 1997. H. C. Stackpole and Jin Song, “Kim Dae-jung’s Sunshine Policy and the Korean Peace Process,” *The Korea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7, 1998 (Seoul: The Korean Institute for National

이에 비추어보면, 햇볕 정책의 두 번째 원칙인 흡수 통일 의도의 공식적인 폐기는 남한과 북한 사이에 존재하는 제로섬 사고방식을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제로섬 사고방식을 수정하게 되면, 극단적인 대결을 피하고 함께 이길 수 있는 길을 찾는 방향으로 전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화해의 증진을 위해서 남과 북은 자신들의 냉전적 사고에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평화를 이루기 위해 남한과 북한이 민족적 유대를 강화해야 한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남과 북이 갈등하고 있지만, 이러한 차이점들 이전에 들은 한민족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이라는 목표를 향해 통일 운동을 전개해 갈 때 민족적 유대를 강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본다. 북한의 정치적 군사적 도발이 관계 진전에 찬물을 끼얹는 경우에도 교류를 지속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아울러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영역을 점점 넓혀 가야 할 것이다. 정치, 경제 영역에서 뿐 아니라, 사회, 문화 영역, 더 나아가 민간 부분의 교류에까지 확대해 나갈 때, 민족적 유대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근식 외 3인. 『통일·남북관계 사전』.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4.
- 양영식. 『통일정책론』. 서울: 박영사, 1997.
- 최덕성. 『종교개혁전야』. 서울: 본문과학장사이, 2003.
- Bainton, Roland H. *Christian Attitudes Toward War and Peace: A Historical Survey and Critical Re-evaluation*. New York/ Nashville: Abingdon, 1960.
- Cahill, Lisa Sowle. *Love Your Enemies: Discipleship, Pacifism, and Just War Theory*. Minneapolis: Fortress, 1994.
- Calvin, Jea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Vols. I, II. Edited by John T. McNeill and translated by Ford Lewis Battles. Philadelphia: Westminster, 1960.
- _____. *Harmony*. Vol. 3. Cited from Wright David F. "War in a Church-Historical Perspective." *Evangelical Quarterly*. Vol. LVII No. 2, April 1985.
- Choi, Jinwook and Park, Sun-Song. *The Making of a Unified Korea: Policies, Positions and Proposals*. Seoul: The Korean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1997.
- Coats, A. J. *The Ethics of War*. Manchester/ New York: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7.
- Erasmus, Desiderius. *The Complaint of Peace*. In *The Essential Erasmus*. Translated by John P. Dolan. New York: Mentor-Omega Books, 1964.
- _____. "Letter to Antoon van Bergen." Cited from Johnson, James Turner. *The Quest for Peace: Three Moral Traditions in Western Cultural Histor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7.
- _____. "Antipolemus; Or the Plea of Reason, Religion and Humanity Against War"(1813). Reprinted in *The Book of Peace: A Collection of Essays on War and Peace*. Boston: George C. Beckwith, 1845. <http://mises.org/daily/4134>.

- _____. *Dulce bellum in expetis*. In *The 'Adages' of Erasmus*. Translated by Margaret M. Phillips.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4.
- Erdmann, Carl. *The Origin of the Idea of Crusade*. Translated by Marshall W. Baldwin and Walter Goffart.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7.
- Hong, Soon-young. "Thawing Korea's Cold War: The Path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n *Kim Dae-jung Government and Sunshine Policy: Promises and Challenges*. Edited by Chung-in Moon and David I. Steinberg.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 Johnson, James Turner. *The Quest for Peace: Three Moral Traditions in Western Cultural Histor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7.
- Kihl, Young Whan. "South Korea's Unification Policy in the 1980's." In *Korean Reunification: New Perspectives and Approaches*. Edited by Tae-Hwan Kwak, Chonghan Kim and Nack Hong. Seoul: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1984.
- Kim, Hakjoon. *Unification Policies of South and North Korea*.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1978.
- Kim, Kook Shin. "The Kim Dae-jung Government and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The Korea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7, 1998. Seoul: The Korean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1998.
- Koh, B. C. "South Korea's Unification Policy." In *The Prospects for Korean Unification*. Edited by Jay Speakman and Chae-Jin Lee. Claremont, Calif.: The Keck Center for International and Strategic Studies, 1993.
- Kwak, Tae-Hwan, Kim, Chonghan and Kim, Hong Nack, eds. *Korean Reunification: New Perspectives and Approaches*. Seoul: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1984.
- Lee, Seo-Hang. "Seoul's Unification Approach and Perspectives on Peace and Security." In *Korean Unification: Implications for Northeast Asia*. Edited by Amos A. Jordan. Washington, D.C.: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1993.
- Lim, Dong-won. "North Korean Policy under the Kim Dae-jung Government."

A speech delivered at a breakfast meeting with the National Reconciliation Council, March 11, 1999.

Luther, Martin. *Sermons on the First Epistle of St. Peter*. In *Luther's Works* 30. Edited by Jaroslav Pelikan. Saint Louis: Concordia, 1955.

_____. "On War Against the Turk." In *Luther's Works* 46. Edited by Jaroslav Pelikan. Saint Louis: Concordia, 1955.

_____. "Whether Soldiers, Too, Can Be Saved." In *Luther's Works* 46. Edited by Jaroslav Pelikan. Saint Louis: Concordia, 1955.

_____. "Against the Robbing and Murdering Hordes of Peasants." In *Luther's Works*, Vol. 46. Edited by Jaroslav Pelikan. Saint Louis: Concordia, 1955.

Moon, Chung-In and Steinberg, David I., eds. *Kim Dae-jung Government and Sunshine Policy: Promises and Challenges*.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1999.

_____. "Understanding the DJ Doctrine: The Sunshine Policy and the Korean Peninsula." In *Kim Dae-jung Government and Sunshine Policy: Promises and Challenges*. Edited by Chung-In Moon and David I. Steinberg.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1999.

Peters, E., ed. *The First Crusade: The Chronicle of Fulcher of Chartres and Other Source Materials*.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71.

White Paper on South-North Dialogue in Korea. Seoul: National Unification Board, 1982.

논문투고일 : 2010. 10. 27

심사개시일 : 2010. 11. 16

게재확정일 : 2010. 12. 03

• 국 문 초 록 •

이 논문의 목적은 전쟁과 평화에 관한 기독교의 신학적, 윤리적 가르침의 빛에서 한국의 통일 정책을 분석하고 기독교 사회윤리적 제안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가장 중요한 정책적 목표인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의 관점에서 남한 정부의 통일 정책을 분석할 것이다. 분단 이후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대중 정부의 통일 정책이 그 분석의 대상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십자군 전쟁에 나타난 거룩한 전쟁(holy war), 루터와 칼빈의 정당전쟁론(just war) 그리고 에라스무스의 평화주의(pacifism)를 다룰 것인데, 특히 이들 속에 담긴 정치적, 윤리적 함의를 검토할 것이다. 기독교 신학의 전통에서 남한의 통일 정책을 분석하려 할 때, 평화주의, 정당전쟁, 거룩한 전쟁과 같은 전쟁과 평화 이론들은 유용한데, 이들의 주된 관심이 평화의 유지와 회복, 평화를 위해 사용한 폭력(혹은 강제력)의 금지 또는 정당화에 있기 때문이다. 셋째, 앞에서 살핀 바를 근거로 기독교 전쟁과 평화 전통의 세 가지 유형인 “거룩한 전쟁 유형,” “정당전쟁 유형” 그리고 “평화주의 유형”을 기술할 것이다. 이 유형들은 사회윤리적 규범을 함축하고 있어서 통일 정책에 내재하는 규범적 지향 혹은 특성을 분석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몇 가지 윤리적 제안을 할 것이다.

주제어 : 통일 정책, 거룩한 전쟁, 정당 전쟁, 평화주의, 기독교사회윤리
